

중일SUNDAY

## [선데이 칼럼] 계엄 사태로 더 깊어진 저성장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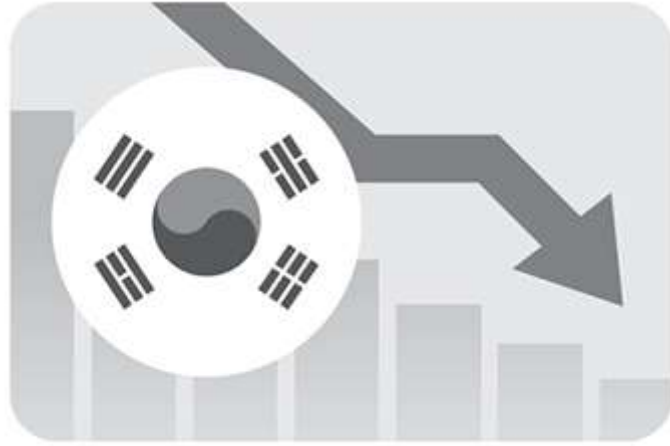
입력 2024.12.07. 오전 12:42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격변의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대한민국호(號)는 구조적 장기침체 경고와 트럼프 발 고관세 태풍경보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며 삼각 파도의 급류에 휩쓸리고 있다. 내년엔 이어 내후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대 저성장은 이미 추락 중인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추세 상황을 마주하면서 2025년 한국경제는 시계 제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저성장, 재정 악화, 만성적 파업, 정치 불안정 등 다층적 병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뿐 아니라 미국 성장률의 반 토막 수준으로 전락한 유럽의 복합 위기를 상기시킨다. 경제 성장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금융 안정화 대책으로 시장 달래고  
재정지출 확대로 취약층 지원 강화  
정국 안정과 경제 살리기 매진해야  
야당은 핵심 개혁 과제에 협조를



이런 와중에 이번 주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경제 환경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치 위기와 국정 동력 상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따른 국가신인도 훼손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은 경제적 파장을 예고한다. 그나마 계엄 사태의 조기 수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복원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지지만 세계 주요 언론에선 선진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과 국가 리스크를 재부각하면서 해외투자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위험 지수(CDS 프리미엄)의 상승과 높은 변동성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서울에 강연차 다녀간 세계적 역사학자이자 정치경제 평론가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필자를 만나자마자 한국 정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물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프랑스가 한때 재정악화의 대명사였던 남유럽 그리스보다 국가위험도가 더 높아진 현실은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경제에 치명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맥락에서였다.

대표적 친트럼프 국제 인사로 꼽히는 그는 트럼프 2기의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려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는 확고한 자유시장주의 철학의 강력한 리더라는 말도 전했다. 좋든 싫든 아베노믹스로 일본 장기침체의 반전 계기를 주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나 혁명적 보수정책을 주창하며 오래된 좌파 페론주의 병폐의 치유에 앞장선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각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였다.

최근 제로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경제의 일본화’ 이슈가 눈길을 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을 지칭하는 ‘일본화(Japanification)’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이 처음 사용한 신조어다. 근년에는 ‘중국경제의 일본화’가 국제 언론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중국의 디플레와 성장둔화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한·중·일 동북아 3국

에서 공통적으로 고령화·고부채·저성장 문제가 보인다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1990년대 일본 불황 초입 시기와 비슷한 데다 정치적 대혼란까지 가중돼 더 엄중하게 다가온다.

이같은 상황을 당면한 대내외 도전 속에 정국 안정화와 경제살리기로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도 가능하다.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에 필수적인 개혁 실천에 강도를 높여야 성장 잠재력 추락을 반전시킬 수 있다. 야당도 그간 입법 독재나 탄핵 폭주 등 정치 불안의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략을 떠나 국내 정치사회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비상계엄 후 폭풍을 조속히 차단하고 경기침체 극복에 올인하도록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여야 정책 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첫째, 비상 금융 안정화 대책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대대적 국가 홍보(IR) 등 비상계엄 사태로 다급해진 주식 및 외환시장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한다. 국가신인도 충격을 차단할 경제·외교적 노력과 민관 합동의 국가적 IR 활동에도 진력해야 할 시기다. 둘째,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경기침체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재정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란 용수철과 같아서 너무 오래 과도하게 눌러있으면 복원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경기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늦기 전에 부양책을 써야 한단 얘기다. 셋째,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핵심 개혁 추진에 야당이 협조해 성장 잠재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일이야말로 청년 세대에게 미래 희망을 주고 구조적 장기침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최선의 길이다.

나아가 정치적 도전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하게 지켜진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널리 각인시켜야 한다. 신냉전 시대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2025년 새해가 내달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9990>

---